

# 2022년 춘포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개요

- 감 사 기 간 : 2022. 4. 12. ~ 4. 14.(3일간)
- 감 사 범 위 : 2020. 1. ~ 2022. 2.(2년2월)
- 감 사 반 : 감사계장 등 4명
- 감 사 중 점
  -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 산업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 II 감사결과

- 총 괄 (단위 : 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회수	추급	반환	세입조치	계	경장계	훈계	주의
13건	3건	10건	-	2건 (○○)	1건 (○○)	-	-	1건 (○○)	4건 (13명)	-	-	4건 (13명)

- 수범사례(우수사례)
  - ▶ 우리 동네 늘 배움터

## Ⅲ

##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원)	신분상
계	13건	시정 3 주의 10	회수 1 세입 1 (○○○)	주의 4 (13명)
1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주의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주의 (4명)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시정	세입조치 (○○○)	
4	직원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	
5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주의		
6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시정		주의 (4명)
7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입금 지	주의		
8	인감 직권말소 소홀	주의		
9	인감증명서 위임발급 부적정	주의		주의 (3명)
10	이륜자동차 신고접수 부적정	주의		주의 (2명)
11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주의		
12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 소홀	주의		
13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주의		

## IV

## 지적사항 요약

### 1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도급, 용역계약의 체결 시에는 대금 청구액의 2.5%를,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 체결 시에는 1.5%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 비용 외 2건을 지출하면서 채권매입 대상임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며,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2020년~2022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의 수령증을 징구하지 않아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③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 이용 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부서 현금영수증 발급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보관하면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매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에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원인 불명의 고정잔액 ③③③원이 유지되는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4 직원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 「익산시 여비조례」에 따르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상시출장 직원들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일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따른 일할계산 등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회에 걸쳐 ○○○원을 부서 직원에게 과다 지급하는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5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고,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야 함.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명에게 통보기한을 최장 ○일까지 지연하여 안내하거나,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명에 대하여는 최장 ◇일 지연하여 촉구하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6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사망,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고 폐기해야 함.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사망 등으로 회수사유가 발생한 ○○명의 장애인등록증을 미회수하였고 등록증 반환통보서 또한 미발송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7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입금 지연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주소, 성명, 배출 일시,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6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토록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 제63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민원인에게 징수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즉시 징수결의하고 다음날까지 금고에 수납하여야 함에도, ◆건(◆◆◆원)을 ●~★일까지 지연하여 납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8 인감 직권말소 소홀

- 「인감증명법」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따르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수 있고,
- 경로장애인과에서 매 · 화장 처리결과를 공문 발송하여 사망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므로 읍면동에서는 매 · 화장 처리결과 공문을 즉시 확인하여 인감 직권말소 등 인감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그러나 망성면에서는 매화장 처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인감대장 직권말소를 지연하여 처리(▲~♣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9 인감증명서 위임발급 부적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및 인감증명사무편람에 따르면 위임자는 위임했다는 표시로 위임장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 대리인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 증명서발급대장에 신청사항(증명인, 신청인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건의 인감증명 위임발급을 처리하면서 위임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을 그대로 수리하여 발급하였고, ●건에 대하여는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위임 신청사항 및 대리인 무인 날인 등을 받지 않고 부적정하게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10 이륜자동차 신고접수 부적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1.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이륜자동차제작증, 3.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3.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4.사용폐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인지세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 및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 소유권을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3,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 접수 시 수입 인지가 부적정 금액임에도 그대로 수리하였고, 사용신고를 대리 하면서 신고인을 대리인이 아닌 위임인으로 잘못 작성한 신고서를 보완없이 수리하거나, 신규 제작된 이륜자동차를 신고하면서 이륜자동차제작증을 미제출하고 양수인 서명(날인)이 누락된 양도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수리하는 등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11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에 의거 지방세의 과세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법(제680조 ~ 제692조)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위임 발급의 경우 위임장에는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고,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사본 가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제시)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지방세 제증명 신청 위임장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요구 없이 수리하여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2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르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한 후 위임장(규칙 제9호 서식)의 위임한 사람란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현주소)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면 등·초본 교부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신청하였음에도 위임을 받아 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첨부를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3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춘포면에서는 전입신고 신고일 기준 ◆~◆일이 도과한 후에야 전입신고 사후확인서를 전산 출력하여 통·리장에게 교부 하거나, 통·리장의 확인일자를 누락하는 등 전입신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특수시책

# 우리 동네 늘 배움터

## ■ 사업 개요

- 사업명 : 원예놀이
- 사업목적 :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 사업선정 : 익산시평생학습관 「우리동네 늘 배움터 공모사업」

## ■ 추진 내용

- 사업기간 : 2021. 5. ~ 9.
- 장 소 : 봄나루작은도서관
- 사업대상 : 춘포면 거주 실버 어르신
- 추진실적 : 총 16회 운영(주 1회) / 참여인원 151명

## ■ 추진 결과



## ■ 추진성과

- 실버어르신들의 문화생활 혜택 및 소통의 장 제공
- 어르신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정서안정 효과 및 인지 기능 향상. 끝.